

동서독의 표준화 체계와 표준 통일 과정:

남북한 표준 협력에 대한 함의*

정 병 기 | 영남대학교**

이 희 진 | 연세대학교

독일 표준 통일은 예상과 달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국가 통일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동서독 간에는 표준 분리의 역사가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화 기구와 서독-소련 간 협정 및 동서독 간 직접 교류를 통해 국가 통일 이전에 이미 표준 협력이 진척되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국가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표준 통일도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이다.

한반도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표준 통일 비용이 전체 통일 비용의 약 10%를 차지하고, 국가 통일도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준비와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 협력을 하루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서독의 주체적 교류 노력과 국제 표준화 기구 내 및 대 소련 관계에서 이루어진 협력을 통해 표준 통일을 준비해간 점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표준 통일, 독일 통일, DIN, TGL, 통일 비용

I. 서론

2010년 통일세 논의부터 2012년 통일항아리 사업까지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우려와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주로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 주민의 수준과 같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재정 소요액을 가리키는 남북한 통일 비용은 적게 3000억 달러에서 많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H00002).

**책임저자

계는 2조5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이승현·김갑식 2011; 박경은 2006).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2500억 달러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이 되기 전에는 비용 조달을 걱정하기에 앞서 비용 절감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치로 인한 군사비 등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비용인 분단 비용이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지출할 통합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한다면 통일 비용은 분단 비용과 통합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험을 보면 급격한 통일로 인해 통합 비용의 의미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¹⁾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한 한국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 비용 면에서는 독일을 타산지석 혹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분단 비용의 최소화이기 때문이다. 분단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당위성을 위한 설득력도 제공한다. 통일의 경제적 당위성은 미래 전망의 측면에서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 발전 효과 외에도 현재적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거나 해소함으로써 통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표준 통일²⁾에 대해서는 급속한 정치적 통일로 인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표준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예를 들어 한국표준협회 2003a와 2003b). 실제로 동서독 표준 통일을 위한 협정은 화폐 및 경제 통합이 가시화되고 정치적 통일이 임박해서야 이루어졌

1) 독일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 비용은 8354억 유로(약 1170조 원), 연평균 약 928억 유로(약 130조 원)였다. 또한 민간 연구 기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2조 유로(2800조 원)로, 연간 약 1000억 유로(약 140조 원)였다고 한다. 이승현·김갑식(2011, 167); 손기웅(2010, 60-62) 참조.

2) 사전적 의미로 ‘통일’은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을 뜻하며, ‘통합’은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을 뜻한다. 다시 말해 통합은 여러 요소들이 독자성을 갖지 않는 완전한 단일화를 의미하는 통일 개념과 달리 여러 요소들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서독 표준은 초기의 통합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동독 표준이 사라지고 서독 표준으로 단일화되었으므로 ‘표준 통일’이 적절한 표현이다. 반면 유럽 표준의 경우에는 각국 표준들을 종합하여 유럽 표준 전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표준 통합이 어울리는 용어다.

으며, 통일 후 독일표준협회(DIN)가 동독 산업 표준에 대해 실시한 조사(Fuhrmann 등의 *Material- und Warenprüfung in der DDR: Anspruch und Wirklichkeit*)도 2010년에야 완성되어 발간되었다. 독일 통일과 관련해 표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동독의 표준이나 표준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상술한 보고서 외에 역시 독일표준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뮈케(Mücke 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동서독 간에는 표준 분리의 역사가 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리 이후에도 여전히 공통 표준을 사용하는 분야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의 일등 공신은 서독 콜 총리나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보다 TV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다(정병기 2010, 4-7). 통일 전에 동서독은 TV 수상기 방식을 통일해 두 지역에서 서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그 문화적 효과가 급속한 통일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자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단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화교류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분단 비용을 줄여 결국 통일 비용 절감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동서독 간에 표준 협력과 표준 통일 노력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그 원인을 밝히고, 이것이 국가 통일에 미친 영향과 국가 통일 이후의 표준 통일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차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포괄적 의미의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하여 독일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 표준 분리 이전의 표준화 역사와 동서독 양국의 표준 및 표준화의 성격을 고찰한다. 이것은 표준 통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정보로서 뿐 아니라 국가 분단보다 표준 분리의 역사가 길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제III장에서 이 표준 통일 과정을 국가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한 후 표준 통일이 국가 통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 통일 이전과 국가 통일 이후의 표준 통일 노력의 차이점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3) 물론 분단 국가의 통일 후 사회에서 표준의 기능은 통일 비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 표준 외에도 인문사회적 표준의 통일을 통해 사회문화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별도의 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II. 동서독의 표준 및 표준화의 역사와 성격

1. 표준 분리 이전의 표준 및 표준화 활동

독일의 정치적 분단은 제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 표준의 분리는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부터였다. 정치적 분단 이후 약 15년 동안 동서독은 동일한 표준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동독에서는 전후 일련의 갈등을 겪으면서 독자적 표준화가 시도된 바 있고 1954년에 독자적 표준화 기구인 표준청(AfS: Amt für Standardisierung)이 설립되었다.⁴⁾ 또한 이때부터 표준화라는 용어도 서독의 Normung 대신 Standardisierung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⁵⁾ 그러나 이미 1952년에 서독의 독일 표준위원회(DNA: Deutscher Normenausschuss)가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표준화 기구의 자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구성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 표준청의 청장이나 그 대리인은 항상 DNA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사실상 표준의 분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DNA는 1917년에 설립되어 현재 근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독일 분단 이

4) 종전 후 소련은 당시 표준화 기구인 독일표준위원회(DNA) 내에 별도로 표준화군정위원회(Militärkommission für Standardisierung)를 설치했고, 서방 3개 연합군정들도 각각 별도의 DNA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서베를린 시정부가 수립된 후 단일 표준화 기구에 대한 독일과 서방의 요구가 높아졌고, 소련도 발전된 표준에 기반한 독일 중장비의 생산 및 교역을 지속하고 이를 소련 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독일 단일 표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네 군정은 1946년 12월 DNA를 통일된 표준화 기구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련 점령 지역에서는 새로운 엔지니어 조직인 기술회의소(KdT: Kammer der Technik)가 창설되어 DNA와 협력했다. 이어 1948년에는 DNA와 KdT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1952년에 동독 국가계획위원회(SPK: Staatliche Plankommission) 산하의 중앙연구 기술청(ZAFT: Zentralamt für Forschung und Technik)이 기술표준화 업무를 이양 받은 후 1954년에 동독 최초의 표준화 기구인 표준청(AfS)이 창설되었다(Mücke 2011, 3-4, 9).

5) 1948년까지 Normung과 Standardisierung은 일상적으로 혼용되었다. 표준 관련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두 개념을 혼용했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은 통일사회당(SED)이 계획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1948년 하반기 계획과 1949/50 2개년 계획을 1948년에 발표하면서 Normung 개념을 DNA 활동에 한정시키고 그밖에 다른 동독 지역 표준화에 대해서는 Standardisierung이나 Typisierung(유형화)을 사용하기 시작했다(Mücke 2011, 25).

전과 서독의 DNA에 대해서는 정병기(2007) 참조). 후발 공업국인 독일은 신속한 산업화를 위해 그 이전부터 표준화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제1차 대전을 앞두고 당시 프로이센 제국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른바 힌덴부르크 플랜(Hindenburg-Plan)에 따라 프로이센은 전투력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기구가 직접 기술 표준들을 제정하고 유통시켰다.

DNA는 정부의 이러한 통제에 대응해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자율적 기구로 출발했다. 1917년 5월 민간 기업들의 제의에 따라 설립된 독일산업표준위원회(NADI: Normenausschuss der Deutschen Industrie)가 그 전신이다(Reihlen 2005, 6-7). 그러나 NADI는 결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국가 기관인 우체국과 철도청 및 군대도 NADI의 주요 고객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관공서와 국영 기업들도 NADI에 참여했기 때문이다(Wölker 1992, 98; Reihlen 2005, 7-8).

초기에 NADI는 산업 표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사무 기구나 병원 시설 혹은 주방 기구 등에서 수많은 표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1926년부터는 명칭을 DNA로 변경하고 산업 표준에 한정하지 않고 표준화의 영역을 넓혀 갔다(DIN 2013a). 또한 이 때부터 “이것이 표준이다(Das ist Norm)”라는 의미로 약자 DIN을 표준 기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1975년에 기구 명칭을 오늘날의 독일표준협회(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로 변경함으로써 표준 기호(DIN)와 일치하게 되었다.

2. 서독의 표준과 표준화 활동

서독에서는 분단 이전의 표준화 기구인 DNA가 존속해 지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이어 갔다. 적어도 표준과 표준화의 역사에서 정통성은 서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DNA는 서독의 유일한 전국적 표준화 기구로서 명칭을 DIN으로 변경한 1975년 이래 국가에 의해 공인받은 공공 기구가 되었다. 세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DIN은 자체적으로 조직한 표준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외 부문은 음향·소음측소·진동공학 부문, 대기보전자문 부문 그리고 전기·전자·정보공학 부문이다. 그러나 이 세 부문에서도 DIN은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표준위원회를 설립해 표준 제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음향·소음측소·진동공학 부문과 대기보전자문 부문에서는 독일엔지니어연합(VDI: Verein Deutscher Ingenieure)과 공동으로 각각 음향·소음측소·진동공학 표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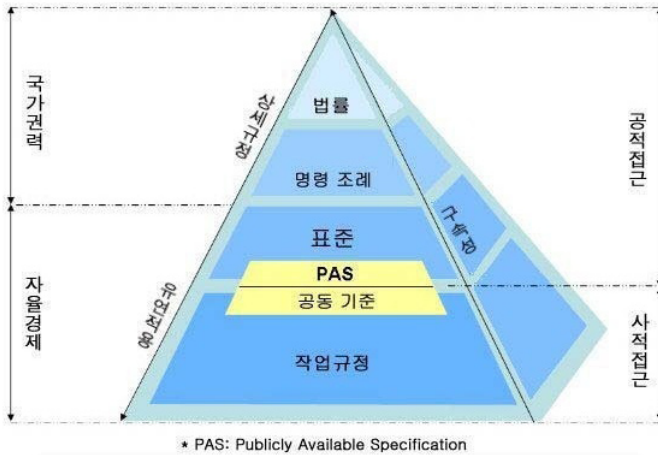
(NALS: Normenausschuss Akustik, Lärminderung und Schwingungstechnik im DIN und VDI)와 대기보전자문 표준위원회(KRdL: Kommission Reinhaltung der Luft im VDI und DIN - Normenausschuss)를 설립했으며, 전기·전자·정보공학 부문에서는 전기전자정보 연합(VDE: 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과 공동으로 전기·전자·정보공학 표준위원회(DKE: Deutsche Kommission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im DIN und VDE)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줄곧 순수 민간 기구로 활동해 왔던 DIN이 오늘날과 같은 국가 표준화 기구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1975년에 체결된 연방정부와 DIN의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이 계약은 1970년대에 가속화하는 국제화의 추세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독 연방정부가 공적 표준화 기구 설립을 두고 고민한 결과였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두고 정부 부처들 간 및 DNA와 논의를 지속한 끝에 개명한 DIN을 공적 표준화 기구로 인정하는 계약을 DIN과 체결하게 되었다. 연방정부와 DIN의 계약⁶⁾은 연방정부가 DIN을 독일 전역에 걸치는 국가 표준화 기구로 인정하고 직간접적으로 DIN을 지원하며(1조 1항과 3항), DIN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표준을 제정하는(1조 2항) 것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DIN은 순수 민간 기구에서 전국적인 국가 표준화 기구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연방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DIN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DIN의 활동에 대해 계약상 규정을 벗어날 정도로 개입할 수는 없고, DIN의 독립적 표준화 활동이 보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DIN 재정의 약 15%를 지원함으로써 DIN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부, 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은 직접적으로 DIN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대부분의 부처도 관련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국가와 DIN의 관계는 표준과 법령의 관계와도 연결된다. 표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적 계약이나 법률 및 명령과 관련될 경우에 한해 제3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표준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법률과 명령 및 조례의 아래 수준인 민간 경제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개별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독자적 작업 규정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표준의 구속성은 공적인

6)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eten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Vertreten durch dessen Präsidenten, Bonn den 5. Juni 1975.



출처: DIN(2013b)

〈그림 1〉 표준의 공적 성격과 위상

효력을 갖는다.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와 같은 각종 사회단체들도 1975년 계약 당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다만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들 및 직업 단체들은 DIN조직 내에 자신들의 대변 기구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해, 이슈와 직업별로 자문기구나 집행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Moritz 2005, 18).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자문위원회로서는 상대적 위상이 높지 않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해, 현재까지도 DIN이 조정해 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DIN은 기업, 단체, 관청 및 다른 산업·상업·수공업·경제 기구 및 단체들로 이루어진 회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과 독일 경제를 위해 표준화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준화 활동은 ‘관련 영역들’로 불리는 전문 영역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로 특화된 표준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화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을 제정한다.

DIN과 그 표준화 활동은 공공 기관을 비롯해 여러 관련 이익단체들이 각축하는 갈등의 장이다. 80여 개에 달하는 표준위원회가 회원 단체들뿐만 아니라, 비회원일지라도 관련 부문에 속한다면 여러 기구와 단체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표준화 작업에 참여시키고 여론까지 반영하는 공개적 이의 제기와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도 재정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표준화 작업에서는 위원회에 참가하여 처음부터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해 나간다.

서독은 일찍부터 유럽과 세계의 표준 시장 진출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DIN은 자체 표준위원회뿐만 아니라 DKE와 같이 비회원 단체들과의 공동 표준위원회 차원에서도 세계를 겨냥한 표준 생산을 주요 목표로 삼아 유럽과 세계의 표준화 기구에 독일 대표들을 파견해 왔다. DIN이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유럽의 세 표준화 기구들인 유럽표준위원회(CEN), 유럽전기표준위원회(CENELEC),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와 세계적 차원의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다. 특히 유럽 차원의 표준화 활동은 1960년대 초반 유럽공동체가 정착하고 유럽표준위원회(CEN)가 창설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독일 통일과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전까지는 대개 서유럽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한정되었다.

3. 동독의 표준과 표준화 활동

상술한 바와 같이 분단 이후에도 16년간 동서독은 기존의 DIN 표준을 계속 사용했고 표준화 활동도 DNA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종전 직후 연합 군정은 전후 복구를 위한 결정을 각 점령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합의했지만, 표준에 있어서는 소련 군정과 미·영·불 연합 군정이 DNA로 하여금 독일 전역에서 표준화 활동을 속행하도록 승인하였다(한국표준협회 2003a, 12; Mücke 2011, 41). 그에 따라 1952년 DNA는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표준 기구의 자격으로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들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에 드레스덴 공대(TH Dresden)에서 DIN은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주의 표준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독 표준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발전된 소련 GOST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1954년에 경제부처 산하 국가기관으로서 AfS가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AfS 대표가 DNA의 당연직 부의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동서독 간의 표준과 표준화는 분리되지 않았으며, 측량 표준에 한해 1946년부터 동독의 독일계량청(DAMG: Deutsches Amt für Maß und Gewicht)이 별도로 담당해 왔다.

동서독 간 표준 및 표준화의 분리는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동서독 간 긴장이 첨예해짐으로써 시작되었다. 동독은 동독 지역 안에 위치한 서베를린을 봉쇄함으로써 동서독 간의 교류를 차단했고, 이러한 긴장은 표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서베

를린에 위치한 DNA의 동독 내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DNA 내 회원 비율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동독은 표준 제정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는 자본주의 진영과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대립과 그에 따른 서유럽과 동유럽의 긴장도 심화되면서 각각 별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때이기도 했다. 특히 유럽 차원에서 서유럽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더욱 발전해 유럽공동체(EC)로서 경제 협력을 경제 통합으로 전환시켜 갔다. 그에 대응해 동구에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협력 기구인 상호원조회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가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 경제 통합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동독은 유럽공동체에 속한 서독과 동일한 표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COMECON 국가들의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독은 1961년에 동베를린, 일메나우(Ilmenau), 예나(Jena)에 있는 DNA 지소를 폐쇄했고, 1964년까지 기존에 사용되던 DIN을 모두 새로 제정된 동독 표준 TGL로 전환했으며, 1969년까지 동독의 모든 회원들이 DNA를 탈퇴하였다(Mücke 2011, 46, 135-140, 176, 196-197). 이후 1972년 말까지 AfS가 측량 표준 외의 표준 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며, 1972년 12월에는 독일계량청(DAMG)과 표준청(AfS)을 통합해 표준화계량검사청(ASMW: Amt für Standardisierung, Meßwesen und Warenprüfung;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부처 산하 국가기관: 이하 ASMW)이 창립되어 이듬해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ASMW는 1978년부터 IEC 가입을 추진해 이듬해에 공식 가입하고, 이어 1987년에는 ISO 가입을 추진해 1988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모든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 차원의 국제 협력 틀 안에 복귀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표준화 활동을 인정받았다.

사실 동독의 국가 표준인 TGL이라는 표기는 1950년 4월 24일 발행된 ‘법률 공보 특별호 표준 제1호[Gesetzblatt Sonderdruck Standards(GBL. SDr. ST) Nr.1]’를 통해 탄생했으므로 동서독 표준의 완전한 분리 이전에 생겨났다(TGL의 도입과 개념에 대해서는 Mücke 2010, 30-34 참조). 그러나 1961년 AfS 설립으로 동서독 간 표준과 표준화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에는 동독 내에서 DIN과 TGL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표준화 활동은 DN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TGL은 동독 지역의 자원 보유 특성에 따라 DIN 이외 영역에 사용되는 특별 표준(Sondernormen)으로 규정되었다.

TGL은 ‘기술 표준-제품 규정-인도 조건(Technische Normen-Gütevorschriften-

Lieferbedingungen)'의 약자인데,⁷⁾ 이것은 동독의 표준 개념인 Standards가 서독에서 사용하는 표준 개념인 Normen을 협의의 표준, 즉 기술 표준에 한정시키고 제품 규정(Gütevorschriften)과 인도 조건(Lieferbedingungen)을 분리해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GL은 1984년 3월 15일 제정된 표준화법(Standardisierungsverordnung)에 의해 계획 경제의 특성에 따라 전체 국민 경제에 구속력을 가지도록 확대되었고, 1990년 DIN에 흡수될 때까지 존속했다. 동독의 TGL은 서독의 DIN과 달리 다른 COMECON 국가들에서처럼 강제적 구속력을 보유하는 법규의 위상을 가졌다.

III. 독일의 표준 통일 과정

1. 독일 통일 과정 이전의 표준 협력

동독이 1979년 IEC에 가입한 데 이어 1987년 ISO에 가입한 것은 동서독 표준 통합을 위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IEC가 전기전자 부문에 한정된 표준화 활동이었으므로 ISO 가입 이후에야 동독은 모든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 차원의 국제 협력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동독과 서독은 표준 협력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ISO의 1국가 1회원 제도에 따라 동서독의 독립적 표준화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1961년 이래 차단된 상호 표준 교류가 적어도 ISO 차원에서나마 재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동독의 ISO 가입 신청은 이미 1972년 AfS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Mücke 2011, 135-140). 이때 서독 DNA도 당시 서독 적황연정(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동방정책에 따라 동독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아직 UN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1973년 UN 가입) DNA가 규정상 혹은 형식적으로는 독일 전체의 표준화 기구로 대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ISO는 결정을 연기했다. 1973년 통합 표준화 기구

7) TGL은 동독 인민들 사이에서 “일상의 좋은 기분(Täglich Gute Laune)”의 약자로 회자되기도 했다.

로 새로 출범한 ASMW도 1974년에 재차 가입 신청을 했으나 ISO는 DNA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독 DNA의 협조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동독 ASMW는 협력을 거부하고 1975년에 신청을 철회했다. 물론 문제는 동독 ASMW만은 아니었다. 1975년 이전의 서독 DNA나 1975년 이후의 DIN도 소극적인 협력 자세에 머물렀을 뿐 적극적 교류 의사가 없었다. 표준에 있어 당시 서독의 우선적인 관심은 독일의 표준 통일보다 유럽의 표준 통합에 있었기 때문이다(한국표준협회 2003a, 24).

동서독의 표준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88년 9월 19일 서독 DIN과 동독 ASMW가 표준 관련 문서교환에 합의한 ‘프라하 협정(Prager Protokoll)’과 1989년 1월 30일 서독 DIN과 소련 국가표준화위원회(GOST: Gosudarstvennyj Standart)가 맺은 표준 협력 협정이다(한국표준협회 2003a, 22-23; Mücke 2010, 200). 프라하 협정은 당시 프라하에서 열린 ISO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진 합의로서 1989년 1월 4일 DIN 및 TGL의 상호 사용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서독과 소련의 표준 협정은 이전에 맺은 1978년 경제 및 산업 협력 협정 및 1986년 과학 협력 협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소련은 독일의 지원을 통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히 표준 협력 협정의 중요한 내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 표준화 기구들과 COMECON 국가 표준화 기구들 간의 표준 협력을 국제 표준화 기구들 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동독도 서독과 표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협정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동서독 간 표준 협력 협정이 ISO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양국 간 표준 통합의 당사자들이 최초의 합의를 이룬 사건이라면, 서독-소련 간 협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후 동서독 간 직접 표준 협력은 같은 해인 1989년 3월 21일 동독에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 통일사회당 정치국이 동독 표준을 유럽 표준에 부합하게 하고 ASMW와 DIN의 접촉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다(Mücke 2010, 228).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표준 협력을 위한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989년 10월 6일 DIN과 ASMW 사이에 ‘표준화와 인증분야 공동협력 협정(Kooperationsvertrag)’이 체결되었다(한국표준협회 2003a, 25-27; Mücke 2010, 202).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교환하고, 2) 생산품 및 품질 보장 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며, 3) 컴퓨터 자기 테이프의 보관 자료를 비롯해 자료에 대한 직접 접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수립하고, 4) 표준 제정 과정과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 협

정은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에 따라 표준에 있어서도 동독 표준이 서독 표준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같은 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국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협정이 동독의 표준이 1984년 제정된 표준화법을 통해 전 국가적 구속력을 가진 법률적 성격을 부여받고 1987년 ISO 가입 이후 더욱 독자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판단은 더욱 뒷받침된다. 반면 이 협정의 조치들은 이후 표준 통일을 위해 서독 DIN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정치적 통일(1990년 10월 3일) 두 달 전인 1990년 8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실제 이후 시작된 동독 내 표준화 활동을 통해 동독 표준들 중 75%는 이미 DIN 표준으로 전환되었거나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10%는 별도의 동독 법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5%만 기술 수준과 기업적 필요에 따라 DIN의 작업이 필요했다(Mücke 2010, 207).

협정 체결 이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협력과 서독 DIN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Mücke 2010, 187-210; 한국표준협회 2003a, 26-27): 우선, DIN은 동독 안에서 반경 80km 이내 지역에 최소한 하나의 공공 진열 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드레스덴(Dresden) 공대, 마그데부르크(Magdeburg) 공대, 로스톡(Rostock) 대학, 에어푸르트(Erfurt)의 기술회의소(KdT)⁸⁾를 비롯한 여덟 곳에 공공 진열 장소를 설치했다. 둘째, DIN은 자신이 독점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설 출판사 보이트(Beuth Verlag)의 저작품을 동독의 표준 출판사인 '표준화 출판사(Verlag für Standardisierung)'에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동독의 구매자나 동독 내 이용자만을 위해 통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동독 화폐로 지불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 7월 1일 '화폐·경제·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후 서독 화폐로 지불하게 되었다. 셋째, 동독 출신의 표준 전문가들이 DIN 표준위원회나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였다. 다만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 이전까지는 객원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 정식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넷째, 동독 기업과 단체들도 DIN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다. 기업과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인민의회 선거 이후부터 정식 가입이 허용되었다. 다섯째, 동독 표준(TGL)과 서독 표준(DIN)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다. 비교 연구는 COMECON 국가들과의 무역을 고려하고 DIN과 ASMW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세계 시장 편입이 가시화

8) 국가기관인 AFS와 달리 민간 엔지니어 조직으로 표준화 업무에 관여함. 이 글 각주 4 참조.

되던 시기였던 만큼 기본적으로 동독 표준이 서독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DIN 표준과 내용이 같거나 시장경제 질서에서 불필요한 동독의 표준들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DIN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거나 DIN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동독의 표준들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독의 표준 전문가들에게 DIN 표준을 이해시키기 위해 양국 표준화 기구는 서로 협력하여 동독 지역에서 많은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법규의 성격을 가진 표준에 익숙해 있는 동독 전문가들에게 임의적·자율적 표준 제정의 원칙 및 절차와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 경향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치적 통일을 향한 격변 이전에 이미 표준 협력 협정에 합의한 결과로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행된 표준 통일 노력

독일 통일은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가장 먼저 가시화된 단계는 7월 1일 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의 체결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 통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매우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 통일 정책도 충분히 무르익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본 것처럼 비록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진 국가 통일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만나마 표준 협력은 정치적 변화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정치적 통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경제·화폐 통합이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표준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토대가 바로 이러한 표준 협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 체결 후 불과 사흘 만인 7월 4일에 동서독 간 표준 통일 달성을 위한 협정(Vereinbarung über die Schaffung einer Normenunion)이 체결된 것이 바로 그 결실이다. 게다가 이 협정도 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DIN과 ASMW의 교류를 통해 이미 5월 7일에 마련된 표준 통일 협정 기획안에 따른 것이었다(Mücke 2010, 229). 협정 체결과 같은 날인 7월 4일에 동독 정부가 표준화 관련 법률(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Norm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새로 제정해 ASMW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전 작업의 결과였다.

표준 통일 협정은 양국 표준화 기구들이 맺은 협정이 아니라 동독 정부와 서독 DIN이 맺은 협정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표준 통일 협정에 대해서는 Mücke 2010, 207-210 참조).

조). 실제 조인은 ASMW 청장과 DIN 국장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양 독일의 경제부장관과 DIN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각기 동독 정부와 서독 DIN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협정에 임했다. 핵심 내용은 동서독이 1961년 표준 분리 이전으로 돌아가 하나의 표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표준 통일도 독일 국가 통일처럼 서독으로 동독이 일반적으로 합병되는 흡수 통일의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분단이 표준 차원의 분리와 성격이 다른 만큼, 표준 통일의 의미도 국가 통일의 의미와 사뭇 다르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동독이 서독에서 분리해 나간 것이 아니라 동서독이 각각 별개의 국가를 건설한 것이라면, 표준은 단일 표준화 기구인 DNA와 단일 표준인 DIN에서 동독의 표준화 기구와 표준이 분리해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와 화폐의 통합이 서독의 체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그 효과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동독 측에서는 동독의 표준과 표준화 기구가 서독 DIN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표준 통일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고(Mücke 2010, 210), 이후 표준 통일의 실질적 행보로 이어졌다: 첫째, 동독 정부는 DIN의 활동을 동독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로 동독에서는 DIN 활동 범위 안에서 독자적 표준화 활동 지역이 된다. 셋째, 동독 정부는 DIN에게 모든 표준화 활동을 인계하고, 넷째로 동독의 기업들도 DIN에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DIN은 ISO와 IEC에서 독일 표준화 기구로서 독일 전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DIN이 ASMW 직원의 다수에 대해 고용을 승계할 것도 구체적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다만 GAB-표준(Gesundheits-, Arbeits- und Brandschutz; 건강, 노동 및 소방보호 분야의 표준)과 군사 분야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 지역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도 특별한 공공상의 이유로 동독 정부가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예외를 허용하되 DIN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SMW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곧 폐지되었으며, 동독 표준인 TGL은 1991년 1월부터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고 DIN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1990년 10월 1일 정치적 통일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350여 기업 및 변호사(Rechtsanwalt)가 DIN 회원으로 이적했으며 ASMW 직원들 중 절반(전체 약 4000명 중 2000명)이 DIN과 기타 관련 기관으로 고용 승계되었다(한국표준협회 2003b, 3-6; Fuhrmann et al. 2010, 146).

3. 독일 통일 이후 표준 통일의 성과와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의 표준 협력과 표준 통일 노력은 국가 통일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급속한 통일 과정 속에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표준 통일 협정도 통일 표준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국가 통일 이후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국가간 협력과 협정 체결 및 기구의 통합들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되는 표준의 통일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실제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표준과 제품들을 모두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에만 근 20년 가까이 걸렸으며(Fuhrmann et al. 2010), 구동독의 표준과 제품들을 서독 표준에 부합시키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게다가 서독은 이미 유럽과 세계적 차원의 국제 표준에 높은 수준으로 부합시켜 놓은 상황에서 구동독 지역의 표준과 제품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도 필요했다. 1990년 9월 독일 연방의회에 보고된 유럽공동체의 제안은 특히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동독의 표준들은 1991년부터 서독 표준에 흡수되지만, 서독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유럽 표준들을 구동독 지역에 모두 적용시키는 기한을 1992년 말까지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Deutscher Bundestag 1990, 34).

이것은 동서독 간의 표준 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COMECON 국가들 간에 체결되고 동독도 조인한 64개 협정들 중 14개만이 당시 유럽공동체에 부합했고 그중 표준과 부호 표기 영역에서는 4개에 불과했었던 현실도 반영한 것이었다(Deutscher Bundestag 1990, 25). 뿐만 아니라 서독 및 유럽 표준의 급속한 적용은 동독 지역 산업의 위축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실제 1990년 6월부터 동독에 유럽공동체 환경 표준을 적용한 결과, 화학 산업에서만 15%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Deutscher Bundestag 1990, 4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적 민간 기구로서 DIN이 감당할 표준 통일 비용이었다(한국표준협회 2003a, 33-34). 초기에 DIN은 통일 후 약 2년 동안 진행될 표준 통일의 비용을 약 1800만 마르크(약 108억 원)로 예상했다. 이 비용을 위해 연방정부는 2년 동안 약 1400만 마르크를 지원하였고, 구동독 지역에서의 표준 판매와 회비 수입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표준 통일에 소요된 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해 2년 동안 예상액의 무려 수백 배에 달하는 3조원이 소요되었고, 이후 완성되기까지 전체 표준 통일 비용은 180조

원이 소요되어 전체 국가 통일 비용의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민 외 2006).

게다가 국가 차원의 전체 통일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 연방정부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표준 판매 및 회비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한국표준협회 2003b, 2). 그에 따라 1992년의 DIN 총예산은 1억6500만 마르크였는데, 1993년에는 1억6000만 마르크, 1994년에는 1억3500만 마르크로 점차 감소했다. 결국 DIN은 예산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조직과 업무를 축소해 나갔다.

이와 같이 국가 통일 후 표준 통일은 구동독 지역의 기반 시설과 산업에 대한 실사가 늦어지고 구동독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DIN 표준을 구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표준 통일 비용이 예산을 크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및 DIN 자체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DIN의 재정과 업무는 점차 축소되었다. 그로 인해 통일 과정의 신속한 진행과 달리 국가 통일 이후 표준 통일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IV. 결론: 남북한 표준 협력에 대한 함의

한국이 독일식의 급속한 통일을 했을 경우 표준통일 비용은 산업자원부의 추계로 약 210조 원에 이르며, 다소 적게 잡은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92조~195조 원이 예상되고, 가장 높게 잡은 미국 국방관련 연구소인 RAND 연구소에 의하면 무려 50조~670조 원에 달한다(박경은 2006). 이 수치는 독일의 표준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남북 표준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대변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독일에 비해 경제 수준이 낮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독일의 표준 통일은 국가 통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물이 반쯤 들어 있는 병’과 같다. 통일에 목마른 한국에서 볼 때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표준 통일을 완수한 독일은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를 반이나 담은 병이다. 그러나 신속한 사회 통합을 바라는 동독 주민들과 막대한 통일 비용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에게 독일의 급속한 흡수 통일은 아까운 물을 반이나 낭비해버린 병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통일에 비교해 표준 통일을 고찰해보면 사뭇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급

속한 국가 통일의 과정 속에 표준 통일도 휩쓸려 들어가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사실이다. 또한 표준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늦어 동독 내의 표준화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표준 통일 준비에 착수해야 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후자의 시간적 문제는 오히려 동독 표준의 분리와 정착이 늦었기 때문에 그나마 서독 표준으로의 통일이 더 수월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방송 표준이라든지 인문 사회적 표준의 분리가 심각하지 않았고, 정치적 분단 이후에도 오랜 기간 단일 표준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후 표준 통일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다. 전자의 문제도 급속한 통일 과정에서 준비가 미비했다고는 하지만, 시간적 한계 속에서도 동서독은 정치적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표준 협력을 시작했고 표준 통일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서독 표준화 기구와 소련 표준화 기구의 협력 협정이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에 비해 동서독은 전쟁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에 있어서도 분리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광범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서독은 남북한에 비해 분단 비용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독일이 통일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은 아직 분단 상황에 있어 남북한의 분단 비용은 가히 비교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통합 비용을 넘어 통일되지 못해 발생하는 분단 비용까지 고려할 때, 비록 직접적인 통일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분단 비용까지 포함하는 전체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현 정세를 볼 때 독일에서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독일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갑작스런 통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그 기회를 긍정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통일을 더욱 진지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전체 통일 비용의 약 10%를 차지하는 표준 통일을 미리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표준 체계에 대한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한때 북한의 표준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류길홍 2012),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되었다. 그중 가장 최근의 예가 2001년에 시작되어 5년간 지속된 '남북 산업표준 통합기반 구축사업'이었다(한국표준정보망 홈페이지 참조). 이 사업은 북한 산업표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남북 표준의 상이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2006년부터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작업들은 남북 관계의 부침과 관련 없이 재개되어야 할 통일 준비 과제다.

둘째, 남북한 표준 담당 기관 간의 교류 역시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접촉의 면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준비 작업은 남북한 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차원,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소련과 서독의 협력이 동서독 표준 통일에 긍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북한에 특히 영향력이 강하고 산업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은 이미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등 표준협력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표준 협력은 비단 남북한의 표준 통일의 배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 통일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 통일은 경제적 효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준은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통합 규범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겨레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이나 컴퓨터 자판 통일 노력은 중요한 시도들 중의 하나였다(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1 참조). 특히 ‘겨레말 큰 사전’ 편찬은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언어소통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국어학자들이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 감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표준 통합 노력은 남북의 생활 방식과 심리적 괴리를 통합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경제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모든 사회적 규범 및 그것의 상징체계가 서독의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동독인들에게 정치경제적 측면 이외의 또 다른 차원에서 좌절감과 소외감을 안겨 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Dale 2010). 통일 후 두 체제에서 유래한 표준의 충돌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비용은 단지 경제적 차원의 비효율성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과 준비를 요한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분단과 표준 분리가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 인문 사회적 차이까지 커져간다는 점에서 이 점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기술표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공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융복합 연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

통일 당시 서독 대통령으로서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äcker)는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고 했다. 분단 비용을 고려할 때 통일이 결코 재앙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커다란 희생을 부를 수 있다. 아직 한국에게는 희생 없는 축복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행운이 있다.

투고일 2012년 12월 29일

심사일 2013년 1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30일

참고문헌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검색일: 2013. 2. 5).
- 류길홍. 2012. “남북의 표준협력 현황과 향후 표준통합 방향.” 2012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소 학술 세미나. 경산. 11월.
- 박경은. 2006. “南·北 ‘따로따로 표준’ 통일 추진.” 『경향신문』(5월 1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81815011(검색일: 2010. 8. 25).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1. “우리말 통일표준안 마련을 위한 남북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common/jsp/fileDownloadOrg.jsp?fileName=%BA%B8%B5%B5%C0%DA%B7%E1\(%C1%A4%BA%B8%C7%A5%C1%D8%B0%FA\).hwp&filePath=P_04_02_05/%BA%B8%B5%B5%C0%DA%B7%E1\(%C1%A4%BA%B8%C7%A5%C1%D8%B0%FA\).hwp&seq=2861&boardId=GPMS.P_04_02_05](http://www.mke.go.kr/common/jsp/fileDownloadOrg.jsp?fileName=%BA%B8%B5%B5%C0%DA%B7%E1(%C1%A4%BA%B8%C7%A5%C1%D8%B0%FA).hwp&filePath=P_04_02_05/%BA%B8%B5%B5%C0%DA%B7%E1(%C1%A4%BA%B8%C7%A5%C1%D8%B0%FA).hwp&seq=2861&boardId=GPMS.P_04_02_05)(검색일: 2013. 02. 05).
- 손기웅. 2010.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교육원.
- 이승현·김갑식. 2011.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정책연구』 통권 171호(겨울), 163-206.
- 정경민·김중윤·허귀식·김원배. 2006. “[표류하는 국가 표준] 5. 남북의 표준 통일(끝).” 『중앙일보』(8월 26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63585(검색일: 2012. 11. 11).
- 정병기. 2007. “독일의 표준정책과 독일표준협회(DIN)의 표준화 활동: DIN의 조직구성과 표준화전략 및 국제표준전략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집 2호, 37-67.
- 정병기. 2010. “통일비용과 표준통일: 확보보다 절감, 통일비용 절감은 표준통일로부터.” 『기술

- 표준』 제103호, 4-7.
- 한국표준정보망(KSSN) 홈페이지, http://www.kssn.net/StdUni/StdUni_info(검색일: 2013. 2. 5).
- 한국표준협회. 2003a. “독일의 표준통일사례 및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자원부 2002년도 연구 결과 보고서』.
- 한국표준협회. 2003b. “독일 통일과 독일 산업표준 단일화(2): 통일을 맞이한 DIN의 구동독 표준 관련 정책 및 결과.” 『DIN 파견관 보고서』 2003-10.
- Dale, Gareth. 2010. “Informal Contac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 Elites in the 1980s: Its Influence upon GDR Policymaking,” EU Special Lectures Programme, Yonsei-SERI Center. 서울. 5월.
- Deutscher Bundestag. 1990.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Drucksache 11/7770(03.09.1990),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1/077/1107770.pdf> (검색일: 2012. 11. 15).
- DIN. 2013a. “Chronik.” <http://www.din.de/cmd?level=tpl-unterrubrik&menuid=47391&cmsareaid=47391&cmsrubid=47514&menurubricid=47514&cmssubrubid=47520&menusubrubid=47520&languageid=de> (검색일: 2013. 2. 18).
- DIN. 2013b. “Gesetzgeber vs. Regelsetzer.” <http://www.din.de/cmd?level=tpl-unterrubrik&menuid=47421&cmsareaid=47421&menurubricid=47436&cmsrubid=47436&menusubrubid=47429&cmssubrubid=47429&languageid=de> (검색일: 2013. 2. 18).
- Fuhrmann, Gunter, Horst Jablonski, Hans-Hermann Lehnecke, Joachim Thiele, und Lutz-Peter Wagenfuhr. 2010. *Material- und Warenprüfung in der DDR: Anspruch und Wirklichkeit*. Hrsg. von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Berlin, Wien und Zürich: Beuth Verlag.
- Moritz, Carl-Heinz. 2005. “Der Normenvertrag in der Praxis: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aus Sicht der Verbraucher.” Vortrag vom Kolloquium am 10. Juni 2005 im DIN. *DIN Mitteilungen* 8, 18-20.
- Mücke, Eberhard. 2010. *TGL – Technische Regeln im Osten Deutschlands. Vom Alliierten Kontrollrat bis zur Normenunion 1945~1990: Eine Abhandlung auf der Grundlage von Dokumenten und Schriften aus Archiven, Gesetzblättern und Publikationen*. Hrsg. von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Berlin, Wien und Zürich: Beuth Verlag.
- Reihlen, Helmut. 2005. “Hintergründe und Entstehung des Normenvertrages.” Vortrag vom Kolloquium am 10. Juni 2005 im DIN. *DIN Mitteilungen* 8, 6-9.
-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eten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Vertreten durch dessen Präsidenten, Bonn den 5. Juni 1975.

Wölker, Thomas. 1992. "Die Geschichte des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 (Hrsg.), *75 Jahre DIN: 1917 bis 1992*, 87-134. Berlin und Köln: Beuth Verlag.

ABSTRACT

Standardization Systems and Standards Unification of Germany and Its Influence on and Meaning to German Reunification

Byungkee Jung | Yeungnam University

Heejin Lee | Yonsei University

It is maintained that the standards unification of Germany was costly very high contrary to expectations and has been rapidly proceeded not sufficiently prepared as well as the national reunification. However, the standards of FRG and GDR were not divided so long and East and West Germany have cooperated in standardiz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tandardization, the West Germany-Soviet agreement and their direct contacts. This process has been only rapidly swept away by the flow of national reunification before it has become ripe enough.

The cost of standards unification i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cost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will be suddenly proceeded in the Korean peninsula as in the case of German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the cooperation in standardization for the sake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reduction of total unification cost. Especially the inter-subjective standards exchanges between FRG and GDR and their cooperation in standardization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standardization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give huge implications for us.

Keywords: standards unification, german reunification, DIN, TGL, cost of unification